



사회진보연대 발행 | 서울시 마포구 연남동 259-12번지 3층 | 02-778-4001~2 | www.pssp.org | pssp4001@gmail.com
 사회진보연대 광주전남지부 | 광주시 북구 신안동 135-7 SJ빌딩 2층 민중행동 | www.pssp.org/gj | pymjhd@gmail.com
 사회진보연대 인천지부 | 인천시 부평구 십정동 580-27 2층 | www.pssp.org/ic | icpssp@jinbo.net
 후원계좌 | 하나은행 711-910262-85707 (정영삼)



재벌투쟁, 노조답게 하자!

재벌체제에 맞서는 노동자운동의 도전이 필요하다

박근혜 정권 구조조정의 반동성

박근혜 정부는 6월 9일 해운업 및 조선업 구조조정안을 발표했다. 조선3사와 현대상선 등 재벌대기업들이 조선 및 해운부문에서 생존할 수 있도록 '12조원'을 마련해 지원한다는 것이다. 게다가 세금이나 국채 발행을 통한 재정지출 방식이 아니라 한국은행의 발권력을 기반삼아 자원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말이다.

예산편성이나 국채 발행은 의회의 동의가 필요하다. 하지만 국책은행의 자본 확충펀드 방식을 활용하면 그러지 않아도 된다. 박근혜 정권이 여기에 사활을 걸었던 것은 △재벌대기업의 손실을 국민이 부담할 의사가 있는지, △손실을 야기한 사업주와 정치권은 누구며 어떻게 책임을 물릴 것인지, △노동자의 희생을 전제로 하는 구조조정 방안은 정당한지 등을 간접적으로나마 국민들에게 일일이 묻고 싶지 않아서다. 이런 논란을 뒤로 하면서 국민경제의 자원을 다시 한 번 재벌대기업으로 몰아준 것이다.

노동자만 손실을 떠안는 구조조정

조선업·해운업 위기란 정부와 재벌의 산업 현대화 실패, 즉 해양 플랜트 실패, 해운업 세계화 실패에서 비롯한 것이지만, 정작 구조조정 과정에서는 현대

상선 최고경영자 몇몇의 경영권과 대우조선 비리에 연루된 정·재계 인사 몇몇만 교체되었을 뿐이었다. 다시금 재벌대기업으로 소유·경영권이 집중되고, (금융)채권단은 구조조정 전 과정의 주도권을 행사하면서 자신의 손실을 메운 뒤, 투자자로서의 권한을 행사한다. 일련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바뀐 것이라고는 전혀 없다.

현대중공업 분사, 삼성중공업의 인원감축, 대우조선해양의 특수선 산업 매각 등 일련의 구조조정과정이 웅변하듯, 채권단이 손실을 메우는 사이 노동자들은 또 정리하고·계약해지 등 고용조정을 수용할 것을 강요받고 있다. 노동자에게만 손실을 전가하는 구조조정 과정 역시 바뀐 것은 없다.

1997년 IMF 외환위기 때도, 2008년 미국 발 금융위기 때도, 노동자들은 양보하고 국민들은 채권단과 재벌들의 손실을 메워줬다. 2016년에도 또, 그래야 하는가?

재벌체제, 근간을 흔들어야 한다

국민경제를 볼모로 재벌의 부채를 탕해주고, 손실을 메워주는 악순환을 중단시키려면, 재벌체제의 근간을 흔들어야 한다. 노동자의 숙련과 기술 축적보다는, 저임금(하청) 비정규직을 활용하

면서 수익을 남기려는 행태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 재벌 계열사 간 순환출자 방식으로 경영권을 유지하고, 최근에는 심지어 국민연금까지 이용해 경영권을 방어하고 친족에게 경영권을 승계하는 행태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 재벌 대기업에 대한 정치적 지원만이 한국경제가 살 길이라고 외치며, 다시금 더 국민경제를 늪에 빠뜨리려는 지배계급의 행태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 노동자의 생존은 뒷전으로 한 채 채권단의 이해만을 반영한 구조조정 행태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

이 과제는 원하청 공정거래, 이익 공유제, 소액주주운동 등 경제민주화 수준의 재벌 개혁으로는 진척시킬 수 없다.

재벌 투쟁, 노조답게 하자

노동조합에겐 이를 현실화시킬 수 있는 수단이 있다. 바로 노동자의 집단적 교섭권이다. 기업별 수준을 넘어 민주노총·산별노조 차원에서, 하청 바지사장이 아니라 원청 진짜사장을 상대로, 실질적인 지배 개입력을 가지고 있는 재벌 그룹사를 상대로, 노동자들이 단결하고 투쟁을 통해 재벌사들을 교섭 자리로 끌어 앉힐 수 있다면, 노동자운동의 여건은 크게 달라진다. 재벌체제를 움직이려는 거대한 지렛대에 노동조합운동이 작용점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금속노조의 그룹사 교섭 투쟁을 주목하는 것은 이와 같은 연유에서다. 하지만 동시에 그룹사 교섭 투쟁에 우려를 표명하는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 자동차 부품사,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를 포괄할 수 없다면, 그 작용점에 힘이 가해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국제노동운동에서도 관련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글로벌 공업사들의 정점에 있는 초국적 대기업에게 납품 하청업체 노동자의 노동조건을 후퇴시킨 것에 대한 책임을 묻고, 전 세계 흩어져 있는 하청 공장 노동자들의 노동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노동표준을 제도화하려는 흐름이 형성되고 있는 것이다. 국제노동운동은 이를 현실화하기 위해서 하청노동자들이 스스로 자신을 조직하도록 돕는다.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들이 원청 삼성을 상대로 임금과 노동조건 개선 및 노조 활동 보장을 받아내려는 요구에, 유성지회 노동자들이 현대기아차 그룹을 상대로 사과를 받아내려는 투쟁에, 조선업 구조조정에 맞서 조직화 사업을 서두르는 활동에, 공단 조직화 사업에 박차를 가하려는 흐름에 주목하는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

재벌투쟁을 금속노조가 노조답게 하는 방법... 우리는 이미 모두 알고 있다.

사드 도입이 핵전쟁을 불러온다 사드 배치 반드시 막아내자!

성주 주민 경찰수사?
적반하장이 따로 없다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항의하는 성주 주민들에게 박근혜 정부는 또 다시 “폭력시위”나 “외부단체 개입” 이니 뻔한 논리를 꺼내들었다. 지난 7월 15일 경북 성주를 방문한 황교안 총리에게 계란과 물병을 던진 성주 주민들을 폭력행위처벌법으로 엄단하겠다고 한다. 적반하장도 유분수다. 대체 분노해야 할 사람은 누구란 말인가?

박근혜 정부는 사드의 위험성에 대한 우려를 무시한 채 사드 배치를 강행했다. 아직 그 안전성이 명확하게 검증되지 않은 레이더 전자파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유해성 검사를 하기보다 “100m 바깥부터는 안전하다”는 말만 앵무새처럼 되풀이하고 있다. 하지만 사드 전자파의 유해성은 완전히 입증되지 않았다. 정부가 인용하는 것은 미군의 2010년 환경영향평가 보고서지만 2012년 육군교범에는 1만평(약 33,000㎡)을 엄격한 출입금지 구역으로 지정했다. 미군의 자료에서도 주장이 일치하지 않고 있는 셈이다. 사드는 막무가내로 밀어붙일 것이



아니라 과학적 검증이 필요한 대상이다. 역지를 부리는 것은 정부다.

군비경쟁의 악순환 불러온 사드

사드는 성주만의 문제가 아니다. 한미 양국 정부는 사드가 “북한의 핵, 탄도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방어적 조치”라 주장하지만, 사드야말로 한반도 긴장을 더욱 고조시키는 무기이기 때문이다. 미국은 예전부터 동아시아, 나아가 전 세계에 적국의 핵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완벽한 방어망’, 즉 미사일

방어(MD) 체제를 갖추길 원했다. 이미 1999년 미 국방부의 한 보고서는 동아시아 미군을 방어하기 위해 한반도에 사드가 배치되어야 한다고 권고했다.

그러나 완벽한 방어망을 가지고 있다는 환상은 역으로 선제공격 의지를 부추긴다. 만약 핵전쟁이 일어나더라도 사드의 보호를 받는 미군은 상대적으로 핵피해를 받지 않을 수 있고, 따라서 더 호전적인 대응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북한, 중국, 러시아라고 모르겠는가? 당장 사드 배치 결정이 발표되자 중국은 “한국은 타격 대상이 되었다”고

밝혔고, 러시아도 한국을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부대를 배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사드 배치는 당연히도 동북아시아의 핵군비경쟁을 강화시킬 뿐이다. 사드로 인해 남한 민중들은 원치 않는 강대국들의 경쟁에 휘말리게 된 것이다.

성주를 고립시켜선 안 된다.
노동자가 막아내자!

박근혜 정부와 보수언론은 성주에 “불온한 외부세력”이 개입해선 안 된다며 성주 주민들의 운동을 고립시키려 하고 있다. 그러나 한반도에 사드가 배치되면 우리의 평화롭게 살 권리는 위협받는다. 안보 공포를 조장하며 우리의 권리를 짓밟아온 저들에게 미래의 평화마저 짓밟히게 놔둘 수는 없지 않겠는가?

지역이기주의로 몰아가는 저들에 맞서 한반도 평화를 외치는 모든 이들이 모여 연대하자.

당장 7월 23일 6시, 광화문에서 열리는 사드 배치 철화를 촉구하는 촛불집회에 모이자. 한반도 민중의 평화를 파괴하는 무기, 미국의 핵전쟁을 위한 무기, 사드를 노동자가 나서서 막아내자!

재벌의 노조파괴에 맞서 민주노조 지켜내자



이름만 바꿔 다시 나타난
노조파괴 청부업자

2016년, 다시 노조파괴 바이러스가 확산되려 하고 있다. 2011년부터 노조파괴로 악명을 떨쳤던 노무법인 창조컨설팅이 이름만 바꾼 채 다시 나타난 것이다. 불법행위로 공인노무사 자격증이 박탈되었던 창조컨설팅 대표 심중두는 경영지도사라는 이름으로 노조파괴 공작을 계속해왔다. 그리고 노무사 자격박탈

이 해제된 올해 7월, 글로벌 원이라는 노무법인을 등록했다. 창조컨설팅에서 근무했던 김형철은 노무법인 예지 대표노무사로 갑을오토텍에서 용병을 동원한 노조파괴를 벌이기도 했다.

노동자 죽음으로 내몬 노조파괴

창조컨설팅은 유성기업, 발레오만도, 상신브레이크, 만도, 보쉬전장, 컨티넨탈 오토모티브, 한진중공업 등 민주노총 금

속노조 소속 사업장 노조파괴의 주범이었다. 어용노조 설립, 공격적 직장폐쇄 등 사전에 치밀한 준비를 통해 노조를 갈라놓았다. 금속노조 사업장 뿐 아니라 영남대병원, 골든브릿지 등 다수의 민주노총 사업장에서도 노조파괴 컨설팅이 이루어지고 있다. 전국 168개나 이른다.

노조파괴 과정에서 발생하는 노동탄압, 차별, 폭언, 폭력들로 많은 노동자들이 고통을 겪었다. 심지어 유성기업에서는 지난 3월 17일 한광호 열사가 지속적인 노조파괴에 견디다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노동조합 지켜내고 인간답게 일하자

노조파괴 시도에 맞선 투쟁을 기세있게 하자.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쪼먹는 악성 바이러스와 같은 노조파괴 컨설팅 업체를 고립시키자. 복수노조를 이용하여 어용노조를 만들고 노동자를 분열시키는 모든 시도에 맞서 싸우자. 다시 현장에서 조합원들을 조직하고, 민주적 노동

조합운동을 되살리고, 노동3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힘을 기르자.

노조파괴 컨설팅을 통해 노동조합을 무력화 하려는 재벌기업에게 투쟁의 힘을 보여주어야 한다. 재벌들의 부당노동행위를 강력히 처벌하고, 복수노조 창구단 일화 제도를 폐지하는 사회적 요구를 만들어내자.

갑을오토텍 투쟁이 말해주는 바

7월 민주노총, 금속노조의 총파업에서 그 저력을 보여주자. 최근 갑을오토텍 박효상 회장 법정구속과 창조컨설팅의 출신이 만든 노무법인 예지의 설립인가 취소는 노동자들의 단결 투쟁만이 해결책을 보여주었다. 유성기업, 갑을오토텍 노동자들 뿐 아니라 전국의 수많은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지키기 위해 힘차게 투쟁하고 있다.

노동자들이 단결하여 전염병 같은 악질 바이러스를 몰아내고 일터에서의 노동권과 생존권을 지켜내자.